굳히기 vs 뒤집기 vs 되치기…3인 3색 민심잡기

문재인·안희정·안철수 '호남 쟁탈전' 가열

文 예비후보 등록 본격 레이스
탕평인사 제시하며 민심 공략
안희정 지지율 급상승에 고무
호남정신 시대적 메시지 전달
안철수 광주 지지율 회복 주력
문재인 비판 존재감 부각 행보

안희정 충남지사 돌풍 조짐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안희정 지사는 첫 권역별 경선지인 호남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격렬하게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과 함께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그동안 정책 행보에 치중하고 탄핵 불씨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둬왔던 문 전 대표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예상보다 빨리 경선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당내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급부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경선의 첫 관문이자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씨는 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문 전 대표도 지난 12일에 이어 3일 만인 오는 15일 다시 호남을 방문한다.

문 전 대표의 호남 메시지도 강화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야당의 본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제가 야권의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SBS 방송에서 '지역탕평 총리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을 위해 탕평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총리 인선부터 탕평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고 강조, 탕평 인사를 고리로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지사 진영에서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결과, 호남 바닥 민심의 열기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리얼미터-MBN이 13일 전국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서, 안 지사의 전국 평균 지지율이 16.7%로 문 전 대표(32.9%)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호남에서도 지난주에 비해 지지율이 6.9%포인트나 뛰어오른 16.4%를 나타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안 지사 진영에서는 호남 정신에 맞는 시대적 메시지 전달은 물론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 공약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조직 역량에 대해 '민심이 곧 조직'이라는 반응과 함께 호남 민심의 근저에 '안희정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13일 광주를 방문, 호남 지지율 회복을 위한 팔을 걷어붙였다. '호남-충청 벨트' 공략을 위한 3박 4일의 첫 일정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 빼앗긴 '집토끼'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5·18 폄훼 논란 사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송영길(가운데) 의원이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을 찾아 5월 단체 관계자로부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5·18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있다. 5월 단체들은 군 출신 인사 영입시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으며 민주당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현배기자 choi@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바람이 매서운 형국이지만, 안 전 대표는 대선 구도가 정리되면 민주당 후보에 대항할 유력주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대선 후보를)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도와주지 않아) 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사실상 문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원, 靑 압수수색 문 열어줄까

특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이르면 내일 결과 나올 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특검 "박대통령 대면조사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쌍방간 접촉 아예 없어"
수사 기한내 성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 사이의 냉각기가 길어질 조짐을 보인다.

13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쌍방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서 출석을 통보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70일)이 이달 28일 만료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조사를 할 시한을 언제인지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방법을 새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이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응하라며 출석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을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백지화했다.

41일간 숨어 있다가…'문고리' 안봉근 오늘 헌재 출석 '7시간 행적' 등 증언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내일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석 의사를 피청구인(대통령 측)을 통해서 알려왔다"며 "지금으로서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직접 만나는 등 '7시간 행적'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이기도 하다.

안 전 비서관의 헌재 출석은 처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41일 만이다. 그는 애초 지난달 5일 2차 변론에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잠적했다. 헌재는 신문을 1월 19일로 미루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이들을 찾지 못했다.

한편 헌재는 14일로 예정된 1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각각 형사재판 출석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또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주소가 불명확해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앞서 9일 12차 변론기일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